

 금융위원회	<b>보도    참고자료</b>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생산적 금융</li><li>• 신뢰받는 금융</li><li>• 포용적 금융</li></ul>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2018.4.5(목)	
<b>책   임   자</b>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(02-2100-2610)		<b>담   당   자</b>	홍 상 준 사무관 (02-2100-2612)	

## 제 목 : 연합뉴스 4.5일자 「연체이자 법령근거 4년째 잘못 적용...당국 “기존 부과 정당”」 제하 기사 관련

### <보도 내용>

- ☐ 연합뉴스는 4.5일자 「연체이자 법령근거 4년째 잘못 적용...당국 “기존 부과 정당”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연체이자율을 규정하던 시행령 조항이 2014년 9월 3일 ‘제9조 제4항제2호로’ 변경...”되었으나 “연체이자율에 관한 금융위 고시\*는 개정 전인 ‘제3항’을 근거로 삼아왔다...”고 하면서,
  - \*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」
  - “잘못된 법령을 근거로 행정행위를 한 것”이라고 언급

### <참고 사항>

- ☐ 법령 개정과정상의 실수로 인한 인용오류가 있는 경우 입법 취지 및 연혁, 실체적 내용 등을 보아 인용을 바로잡아 운용하는 것이 판례, 법제처 해석\* 등에 따른 일관된 적용례임
- \* 대판 2005다60949, 법제처-06-0097 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(6) (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)” 등
- 이에 따라, 종전 고시의 인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규정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,

○ 여신금융기관이 종전 고시를 위반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였다면 제재 등 행정처분 대상임

□ 금번 고시 개정시에는 취약 연체차주의 보호 강화를 위해 연체이자 규율의 내용을 실효성있게 정비하면서,

○ 자구 측면의 인용 오류도 병행하여 보완한 것으로 고시의 실제적인 효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